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등 중고교 역사교과서 반영

교육부, 새 교과서 '편찬준거' 주요사항 안내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이 빠졌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표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편찬준거는 검정교과서를 쓸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인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은 문서다. 출판사 등 민간에서 쓴 교과서 내용이 다르면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집필상의 지침이다.

이날 공개된 편찬준거를 보면, 당국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역사(한국사·2)에 한정해 편찬상의 유의점에 '부록 형태로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실었다' '아울러 같은 지침 내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편찬상의 유의점 부록의 학습 요소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역사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8월 민주 항쟁'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등 120개 학습요소(단어)를 실었다.

고등학교 한국사·2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119개 학습요소를 반영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의 129개 학습요소와 비교해

10개 적은 것이다.

이어 같은 교과 검정기준에도 총점 100점에 30점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의 검정 및 심사 항목에 편찬상의 유의점을 준수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했는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했다.

본래 학습요소는 편찬준거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실리는 내용이다.

지나해 말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에서는 각 영역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중 학습요소가 빠졌다.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를 편찬준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완성 지역발전 지원 약속”

민주, 익산시청서 현장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 “전북 도약 위한 디딤돌 모아갈 것”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수소특화산업 조성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익산시청에서 제63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대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게 돼 자랑스럽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새만금 시대의 완성,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도시 확대 같은 전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확실히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아태미스타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주당이 전담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자치도의 패거리를 신속히 이뤄낸 도민 여러분 축하한다”며 “도민의 뜻을 받은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청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가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특별자치도법의 후속 보완조치도 챙겨갈 것”이라고 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성공적이었다”며 예산 9조원 확보의 노력을 감평한 도지사인 한병도 도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의 뒤로 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전하는 한편 쌀값 인상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올해 전북이 성공시켜야 할 숙제가 3가지가 있다”며 “도민의 숙원인 공공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청과 유희태 완

주군수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건의했다.

정현을 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회 신도시 유치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제2회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며 “전주가 전북 행정의 중심에 있다면 교통 중심지인 익산은 전북 전체 발전 중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군수는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세계 최초 수소 트럭·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과 신재생에너지 평가체계인 ESS 안전성평가센터 조성 등에 나서고 있음을 피력했다.

유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뉴시스

“尹정부, 에너지 가격 인상 대응 시기 놓쳐”

정책포럼 '사외재'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외재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사외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스공사 미수금의 44%가 4분기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미수금이 정권이 바뀐 뒤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앞서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권에 반박한 것이다.

사외재는 “국내 가스요금과 한국 가스공사의 실적은 환율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2022년 4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윤석열 정부는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8월 이후 환율 급등, 10월에 고점에 도달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제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 2021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초에 안정화됐다. 2022년 3월 이후 급등해서 8월에 고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급등과 국제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겹쳐진 시기는 2022년 3분기 후반부터 4분기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7조원의 한국

가스공사 미수금의 44%(3.1조원)가 4분기에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중 발생한 가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2022년 2분기부터 요금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로 부처 간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원가 상승분까지 예측해서 미리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외재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 주장으로 책임 회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기한 정책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서민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완주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개채용

내달 6-8일 원서접수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4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계약이 가능하며, 채용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예산 및 결산상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인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의회 누리집(<https://council.wan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완주군의회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군의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공개채용으로 완주군의회에서 채용할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